



전 재 완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정부의 역할

주요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 심의조차 못하게 되는 등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이 전면적으로 봉착상태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표면적인 이유는 노동계 반발과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구조개편 계획의 졸속 수립과 미흡한 사후 대책방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편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최근 대부분 국가에서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동향이다. 경제개발 초기 민간투자재원의 부족과 공공성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에너지산업을 직접 관리해 왔다. 그 결과 공급기반이 빠른 시간내 확충되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독점구조와 공기업 경영에 따른 비효율

문제는 항상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의 점진적 해소를 통해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산업을 국내외 민간 기업에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구조개편 계획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을 광의로 해석하면 에너지산업의 조직과 구조를 국영에서 민영, 독점에서 경쟁, 폐쇄에서 개방, 개입에서 자율로 전환하는 구조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충분한 경제적 당위성이 있는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본질적으로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도 전에 현재와 같이 난관에 빠져 있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조개편에 따른 보완 대책이 부족한 것을 포함하여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구조개편 과정과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과 정부의 사후관리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21세기 초반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화두는 구조개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민영화를



전반적으로 볼 때 구조개편 계획이 내용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개편을 통해 21세기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 에너지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재정립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은 우리나라 중장기 에너지산업 정책의 한 수단이지 구조개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구조조정이 항상 시장과 산업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은 에너지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구조개편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 효율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계획 수립과 실천 못지않게 구조개편 과정과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과 정

부의 사후관리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조개편 이후 정부의 시장관리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의 안보성, 공공성, 환경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차원에 입각한 통합자원계획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구조개편과 관계없이 에너지는 중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통제기능과 조정기능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에너지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최근의 정책기조는 계획의 수립과 실천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사후관리에 대한 대비는 경시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정책기조라면 구조개편 이후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고유 시장관리 기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축소되고 이에 따른 수급 및 가격불안정, 자원배분의 비효율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정부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계획의 궁극적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정책

의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구조개편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하여 에너지원별, 사안별 종합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조개편 이후 정부의 에너지시장에 대한 역할과 기능은 상실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오히려 새롭게 추가되거나 부분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이후 필요한 정부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조정, 관리기능을 제시한 후 이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불안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긍정적 기대효과에 너무 치중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사전 점검하여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구조개편 정책이 내용 면에 있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